

기고



안종수

한국해양관광학회 고문  
前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관광코스 중심지역으로 디자인하자

적으로 확대해 가까운 이웃나라와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관광코스'의 중심지역으로 디자인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남해선이 개통되면 부산과 목포를 2시간대에 달리고, 목포 상해간 여객선 또는 목포-제주-상해간 크루즈가 동시에 운행되면 남해안은 서쪽으로 상해-항주-심천-홍콩-싱가포르까지 철도와 항공으로 연결된다. 동쪽 일본과는 이미 부산-후쿠오카-동경으로 연결이 잘돼 왕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남해안을 일본과 중국으로 잘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하는 각종 정부사업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남해안에 계획 중인 중요사업을 국제공모사업으로 진행해 해상국립공원을 세계적으로 알려야 한다. 남해안의 어촌 뉴딜사업, 중요한 토목-건축공사, 각종 축제, 전시회 등은 좋은 소재이다. 남해선 개통은 한국의 남해안을 세상에 알릴 더 없는 기회이다. 규모 있고 세심한 국제 마케팅을 구상해보자. 부산-목포간 철도를 남해선으로 명칭을 통일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여행전용열차로 디자인하고, 운행 첫 5년 간은 한시적으로 남해안 입국 외국인 여행자에게 5일 동안 무료승차를 제공한다. 예상되는 결과는 이 지역 여행자들이 열차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남해안의 매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다. 5년을 이렇게 운영하면 남해안은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에게 여행의 로망을 꿈꾸는 지역으로 부각돼 세계적인 매력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5년간 무료 제공하는 철도운임 보전은 각 지역의 관광 홍보비와 고항사랑기금 등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 남해안을 살리는데 이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투자는 찾기 어렵다. 남해선 개통과 동시에 상해-제주-목포 여객선과 크루즈 운항 개시도 필요하다. 목포항의 크루즈 시설도 필요하다. 인근에는 다도해상국립공원 전주 지리산 광주 신안 섬 등을 둘러볼 자원이 많다.

이와함께, 남해안 국제관광코스 조성과 지역산업연계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남해안 지역은 좋은 풍광 속에 생산되는 청정 농수산물이다. 내국인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많이 한 연유로 국내에서 그곳의 건강식품과 소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해 왔던 것을 보면 남해안도 일본과 중국인 여행자에게 이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여행자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웃나라에 청정지역 농수산물을 공급하자.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유치와 테마 섬을 조성하자. 뛰어난 다도해 자연유산을 활용해 관광핵유치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방안이다. 동북아시아에 국제기구 유치는 한국의 국가위상에 매우 중요하다. 남해안은 두 개의 해상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세계국립공원기구를 창설해서 유치하기에 좋고, 2차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각국의 NGO 단체를 조직화 하는 국제 NGO 본부를 창설을 UN과 협의하고, 각종 테마 섬을 유치하는 방안도 본격적인 검토와 연구를 해가자.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남해안을 전담하는 독립행정 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필자의 구상도 정책에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

싱가포르-홍콩-항주-상해-제주도-목포-부산-후쿠오카-동경을 잇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발전시켜 가려면, 싱가포르-홍콩-상해-제주-목포-부산-규슈-동경(7Stars)을 연결하는 동북아 해양관광코스를 조성하는 주장을 해왔다. 최근에는 중국 상해에서 한-중-일 3국 크루즈 전문가 세미나에 참가해 남해안 발전을 주제로한 '7 Stars & Cruise'를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목포간 남해선 개통은 남해안의 새로운 번영을 디자인할 절호의 기회이다.

남해안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시대의 해양중심지역이다. 이 지역 연간 국제 관광객수는 약 2억 명 이상이고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약 6억 명이 상주하는 황금 시장이다. 그럼에도 남해안은 국제적인 교통연계가 너무 취약해 한국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수준에 불과하다. 뛰어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해안은 경기 침체와 인구감소 현상 때문에 소멸 위기지역으로 앞날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남해안에 어촌 뉴딜사업중심으로 상당한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을 해왔고, 기존 경전선에 보성과 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선을 건설 중이다. 이런 기회에 남해안 교통체계를 국내적 시각에서 국제

기고



최영희

광주 동구가족센터 팀장

다문화 제도에 대한 개선점과 발전 방향

도 추진중이다. 다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지속적인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문화 제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촉진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며,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의 다문화 행사 등은 이러한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문화 제도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게 기여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은 한국의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노동 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돕고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 그 기여도가 높다.

이와 같이 다문화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단순히 인력 공급을 넘어, 소비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로 이어진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제도는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기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 제도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 언어 및 문화 교육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제라는 여러 가지 개선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의 다문화 제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

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언어 및 문화 교육의 미비,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제는 다문화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한국의 성공적인 다문화 정책 중 하나는 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이다.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센터에서는 언어 교육, 직업 훈련,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주민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지원은 다문화 가정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먼저 포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 사회의 참여를 증진시켜 다문화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통해 한국 사회는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존엄하게 대우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겪고 있다.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 언어 장벽,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한국은 21세기 들어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한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민의 주요 구성요소로,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아시아 국가에서 온 여성들의 비중이 많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형성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언어 장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지원, 언어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독자투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고층 건물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완강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에서 창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필수 피난기구로 아파트, 숙박시설, 병원 등 다양한 소방대상물에 설치된다.

화재 생명줄, '완강기' 사용법을 익히자

완강기를 사용하려면 ▲지시대와 보관 위치를 확인하고 ▲속도조절기, 고리, 로프 등 구성품을 점검한 후 ▲지시대를 창밖으로 고정하고 로프를 던지며 ▲벨트를 몸에 단단히 고정시켜 천천히 대피해야 한다. 특히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양팔을 벌리고 발로 벽을

밀며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민과 관계자들은 평상시 완강기의 관리와 사용법 숙지를 철저히 해 화재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줄'이 썩은 동아줄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선근·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학교급식비 갈등 봉합 전남도-도교육청 더 소통해야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급식비 분담 비율에 합의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정회될 상황에서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된 것이다.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토대가 갖춰졌다.

내년 무상급식비 예산은 1천651억원 규모이며,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 특수학교 등 2천199개교 21만9천명으로 끼니당 4천633원이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도와 시·군이 780억원(47%)을, 교육청이 871억원(53%)을 투입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 30%, 교육청 70%로 정해졌다며 반발했으며, 전남도는 현물로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비용을 제외한 현금 분담률로 실제론 각각 47%, 53%라며 맞섰다. 협상 과정에서도 도교육청은 40%, 60% 비율로 일단 2년간 적용하자고 제시했으나 전남도는 내년부터 35%, 65%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조율에 실패했다. 결국 양 측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회 이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40%, 60%로 타협에 성공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상호 간 이해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더구나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시작으로 핵심 공약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치는 어떤 행위라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옥신각신 다투는 행태로 비춰지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근심이 컸다. 애초에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부터 불미스러웠다.

세수 부족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무상급식까지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원만히 수습됐다. 전남도가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더라도 더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시·군은 재원 마련에 갈수록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도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도 개선돼야 하는 대목이다. 원가 절감을 구실로 급식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최고의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남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함께 짊어져야 할 의무다. 앞으로도 협조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광주방송 출연료 특혜 논란 종지부 찍나

GGN 글로벌광주방송(구 광주영어방송)이 '김광진'의 오마이광주'를 이달 말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부터 방송을 진행한 김 전 부시장은 5개월 만에 하차하게 됐다. 글로벌광주방송은 10분 당 5만원의 기준으로 1시간에 30만원, 월 600만원 이상을 지급해 과다 출연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의회에서 명백한 특혜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앞으로 논란이 수습될지 관심이 모른다.

김 전 부시장도 적잖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영어방송 폐지론이 나오는 시기에 광주가 지켜온 좋은 플랫폼을 시대에 맞게 잘 개편할 수 있다면 힘을 보태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다.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글로벌광주방송 전제로까지 커지는 것 같아 그만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글로벌광주방송이다. 특히 존레 기로에 섰던 만큼 제반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고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록 유념해야 했는데, 오점을 남겼다. 내부 규정상 10분당 4만원 특급 등급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지상파 3사가 유명 시사 평론가에게 하루 30만원을 책정한 사례는 있지만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온당치 않았다. 시민들도 그 배정에 공금증을 드러냈다. 한 해 22억원 규모인 재정 상황,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평균 250여명인 점 등을 감안해서도 무리였다는 평가다.

글로벌광주방송은 2025년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한다. 외부의 거센 압박 등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방송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하니 당면 과제인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해서 더 이상 입찰에 오르는 상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경영 상의 위기를 들고 정상화의 길로 조속히 들어서야 한다.

개국 15주년이다. 국내외 거주 외국인 모두를 아우르며 새롭게 도약한다는 목표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잘 닦아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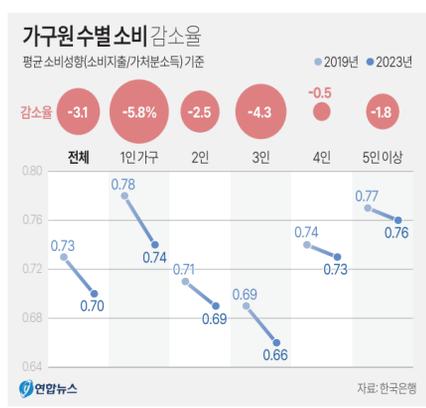
그래픽 뉴스

1인가구 소비감소를 가장 높아... '월세·물가 등에 지갑 닫아'

최근 크게 늘어난 우리나라 1인가구가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 등에 썩씩거리며 줄이면서 전체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최근 1인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2019-2023년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 변화 조사에서 1인가구의 감소율이 5.8%(0.78→0.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3인 가구 -4.3%(0.69→0.66) ▲2인 가구 -2.5%(0.71→0.69) ▲5인 이상 -1.8%(0.77→0.76) 순으로 심했다.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 약화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거치면서 오른 주거비가 지목됐다.

1인 가구의 지출 가운데 2023년 기준으로 월세 등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평균 20%를 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월세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히 청년층 1인가구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생활물가, 다른 가구원들과 경제 충격을 분담하기 어려운 1인가구의 구조적 특성 등도 소비성향 약화의 요인으로 거론됐다. 2023년 기준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이고, 전체 소비 지출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20%에 이른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